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포항시장(2024. 05. 31.)

나. 회부일자 : 2024년 06월 04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4. 06. 26)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해양항만과장)

가.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반영예정 지구별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매립예정지 : 포항시 남구 송정동 394-1번지와 402번지 공유수면
- 매립예정면적 : 1,353,804m²
- 매립목적 :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사업기간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일 ~ 2041년

다. 매립 기본계획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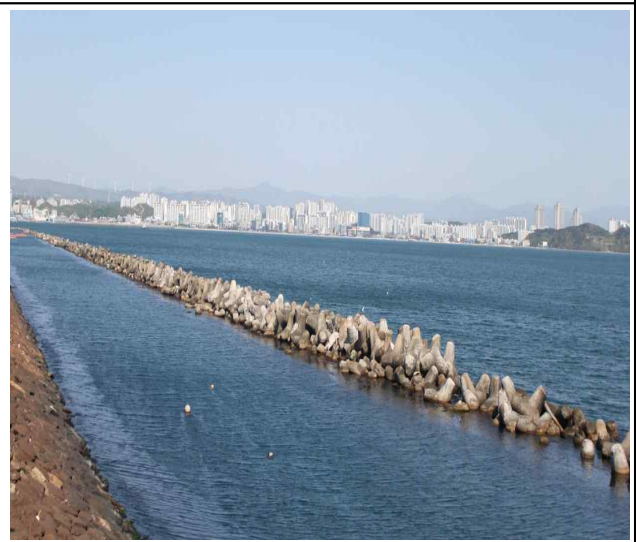
-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주요 목표로 도입 예정인 수소 환원제철(HyREX) 공정을 2050년까지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신규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
 - 대한민국 CO2 배출량 8.7억톤/년 중 포항·광양제철소의 CO2 배출량이 0.87억톤/년(2018년 기준)
 - 현재 포항제철 산단에는 동 시설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부재한 실정
- 제철소 특성상 현재의 제철소 인근에 수소환원제철 설비가 조성되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

라. 매립 기본계획 변경(안)

〈위치도〉



〈현장모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반영예정 지구별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화를 위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주요 목표로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2050년까지 원활히 정착시켜야 하므로,
- 포항제철 산단도 철강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게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수소환원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것은 포스코와 지역경제의 미래와 인구소멸 대응에도 결정적일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연관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항시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구성에 따른 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135만㎡의 대규모 면적이며 이는 영일만의 많은 지형 변화로 해양 등 자연 생태계에 각종 문제점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4투기장으로 인해서도 해양생태계 변화(송도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해양물리 및 지형 영향변화로 인한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냉천 하구의 연접지점에서 퇴적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병목 현상이 가중되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매립으로 해안선 연장에 따른 지형 변경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더 커질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재해사전 예방대책 방안 마련 필요함.

- 제철소 설립 후, 50여년간 환경오염과 악취, 미세먼지 등 고통에 시달렸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과 헌신으로 인내하며 견뎌온 포스코 인근 해도, 송도,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주민합동 설명회 개최 시 강력히 반대를 표명함으로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환경단체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나 바다매립을 통한 수소환원제철소 부지확보는 환경, 재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반대의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 사업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및 어민 피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 자연재난 등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포스코측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철저히 이행 할 것을 전제로 사업 승인 및 허가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항시의회, 포항시, 중앙정부, 포스코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시 까지 주민 의견 수렴, 사업추진의 과정, 방향성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통한 상생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 이에 중앙정부와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공감대 형성과 합의로 모든 포항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의견서 별첨)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서

-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화를 위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주요 목표로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2050년까지 원활히 정착 시켜야 하므로,
- 포항제철 산단도 철강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게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수소환원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것은 포스코와 지역경제의 미래와 인구소멸 대응에도 결정적일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연관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항시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구성에 따른 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135만㎡의 대규모 면적이며 이는 영일만의 많은 지형 변화로 해양 등 자연생태계에 각종 문제점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4투기장으로 인해서도 해양생태계 변화(송도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해양물리 및 지형 영향변화로 인한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냉천 하구의 연접지점에서 퇴적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병목 현상이 가중되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매립으로 해안선 연장에 따른 지형 변경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더 커질 위험성이 예상됨으로 재해사전 예방대책 방안 마련 필요함.

- 제철소 설립 후, 50여년간 환경오염과 악취, 미세먼지 등 고통에 시달렸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과 헌신으로 인내하며 견뎌온 포스코 인근 해도, 송도,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주민합동설명회 개최시 강력히 반대를 표명함으로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환경단체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나 바다매립을 통한 수소환원제철소 부지확보는 환경, 재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반대의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 사업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및 어민 피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 자연재난 등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포스코측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철저히 이행 할 것을 전제로 사업 승인 및 허가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항시의회, 포항시, 중앙정부, 포스코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시까지 주민의견 수렴, 사업추진의 과정, 방향성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통한 상생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고,
- 이에 중앙정부와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하여 공감대 형성과 합의로 모든 포항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2024년 06 월 26 일

포 항 시 의 회